

李·文 “현재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 당 내부 분열 대응해야”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최근 文 가족 향한 검찰 수사 대해
“정치·법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탄압
가짜 뉴스로 내부 분열돼선 안 돼”
李,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최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리스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약 40분 정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최근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 미완성에 대해 공감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흥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있었던 가짜뉴스를 예를 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박 원내대표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것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 이후 ‘평산책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른 시민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들어서자 시민 및 가족들은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에서 민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및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전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묵념했다. 그중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생애가 기록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 전시관’ (노무현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시관’에서 차성수 전시관장과 함께 잠시 자리에 앉아 추석에 진행될 추석 특별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시관에 나열된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청주교도소에서 썼던 옥중 서신 등과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읽었던 서지 등을 관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시관에서 포스트잇에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을 적어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전 여사 예방을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권 전 여사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여사님도 걱정하고 있고,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채 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등 與野 설전 전망

정치·안보·경제·교육 분야 순서로
총 11명 의원, 정부 부처수장에 질의

국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국정 전반에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공방을 거듭하다 3개월만에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을 통과 시킬만큼 여야 정쟁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

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과 야당 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총 11명의 의원이 한 명당 12분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부처 수장에게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이외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정치분야에선 ▲채 상병 특검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관련 수사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야당의 탄핵 공세 ▲정쟁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준

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례법 추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명절 전 의료대란 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 여부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부 측 대책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저출생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로 정상적인 대정부질

문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7월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으로 파행으로 얼룩진 바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野, 의료대란 대책 논의 박차… 의료계 참여는 ‘미지수’

한동훈發 ‘여·야·의·정 협의체’
대통령실·민주당 ‘호응’… 금주 논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

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총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시

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